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11
2023/04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영길 | **감수** 목진용, 남정호 | **담당** 김지혜 Email: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법 연구실(051-797-4767)

Contents

국제법원

국제사법재판소(ICJ) ····· 2
ICJ,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무' 권고의견 요청에 관한 유엔 및 유엔 회원국 서면 진술서 제출일 공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5
ITLOS,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사건 판결

국제기구

국제해저기구 ····· 11
ISA, 7월부터 광물개발을 위한 잠정 승인 신청서 접수 시작

지역별 동향

아시아 ····· 15
중국 중국 해군, 74주년 기념식에서 항모·대형구축함 추가 계획 밝혀
중국 중·일, '제15회 해양업무 고위급 협상' 회의 개최
중국 중국, 해양법 교육 및 해양 전문 인재 강화 방침
일본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 AUV 전략 방향성 제시
일본 2023년 일본 외교청서 공개
일본 일본, 제4기 해양기본계획 결정
일본 일본 방위성, 해상보안청의 통제요령 마련
필리핀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 스프래틀리 군도 순찰 중 중국 함정과 대치

북아메리카 ····· 40
미국 미국의 북극 경쟁과 대처 방안

유럽 ····· 45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 해상법 집행 협력에 관한 MOU 체결

태평양도서국 ····· 48
미국 미국, 마이크로네시아와 오세아니아 해양안보작전(OSMI) 실시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 50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

전문연구원 김 지 혜

ICJ,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무' 권고의견 요청에 관한 유엔 및 유엔 회원국 서면 진술서 제출일 공지

지난 3월 2일 개최된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가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후 4월 12일 유엔 사무국장은 지난 3월 29일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근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ICJ는 규정 제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4월 17일자로 ICJ 회원국들에게 권고적 의견DL 요청된 사실을 공지했다. 이어 ICJ는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이 그 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ICJ 규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일을 2023년 10월 20일로 정하였다. 또한, ICJ 규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기구들이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대한 의견을 2024년 1월 22일까지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현 절차 단계에서 서면 진술서와 의견서는 비공개이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있는 남태평양 소도서국 바누아투를 필두로 제출된 결의안이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됐다. ICJ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해당 결의안은 국가들이 세계 기후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들의 기후를 보호할 의무에 대한 작위와 부작위로 인해 소도서국들과 미래 세대에 특히 상당한 기후 피해를 입힐 경우 이에 따른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

유엔 헌장,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파리협정, 유엔해양법협약, 상당한 주의의무, 국제인권협약 상 인정된 권리, 심각한 환경 피해 방지 원칙,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 등을 특히 고려하며,

1) 국가들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과 기타 환경 부문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

국제사법재판소
ICJ

2) 국가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다음에 대해 기후시스템과 기타 환경 부문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앞서 언급된 국가의 의무에 따라 어떤 법적 결과가 따르는가?

(a) 국가, 특히 지리적 상황과 발전의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특별히 취약하거나 특별히 영향을 받거나 또는 피해를 보는 소도서개발도상국을 포함

(b)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효과의 영향을 받는 현재와 미래 세대 사람들과 개인

그림 1.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유엔 사무국장



그림 출처: U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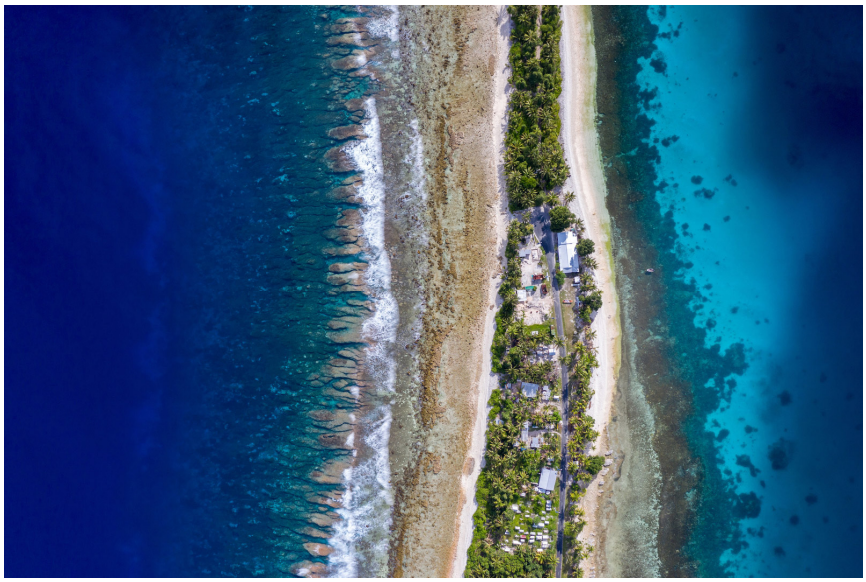
ICJ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또는 이 헌장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허가받은 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유엔 헌장 제96조에 따르면, 유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ICJ에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언제든지 그 활동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또한 요청할 수 있다.

권고적 의견은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대신 ICJ가 제시하는 권고적 의견은 상당한 중요성과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현재의 파리협약처럼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로 바뀔 수도 있는 등 향후 기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용에 따라 기후 관련 국제협상에서 기후위기에 위약한 소국들의 입지도 강화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

그림 출처: CNN

그림 2.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는 투발루 섬



출처 : [1]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der, 2023년 4월 20일,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2]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ess Release, 2023년 4월 25일, “The President of the Court makes an Order organizing the proceedings; she fixes the time-limits for the presentation of written statements and for written comments on those statements” [2] The Conversation, 2023년 4월 3일, “The UN is asking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ts opinion on States’ climate obligations. What does this mean?”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연구원 김 민

ITLOS,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사건 판결

그림 3. 모리셔스와 몰디브 해양경계획정 사건의 변호인단



그림 출처: The Times of Addu

판결 요지

4월 28일, ITLOS 특별재판부(Special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 양국의 중첩된 배타적경제수역과 200해리 내측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 모리셔스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이다.

재판부는 3단계 접근법을 이용하여 경계획정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거리선의 기점으로 블렌하임 리프(Blenheim Reef)를 고려해야 한다는 모리셔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관련 해안의 면적 92,563㎢ 중 45,331㎢는 모리셔스, 47,232㎢는 몰디브에게 할당, 양 당사국에게 할당된 면적의 비율이 1:0.960으로 몰디브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그림 4. 양 당사국이 주장한 경계선 (모리셔스 주장(파랑), 몰디브 주장(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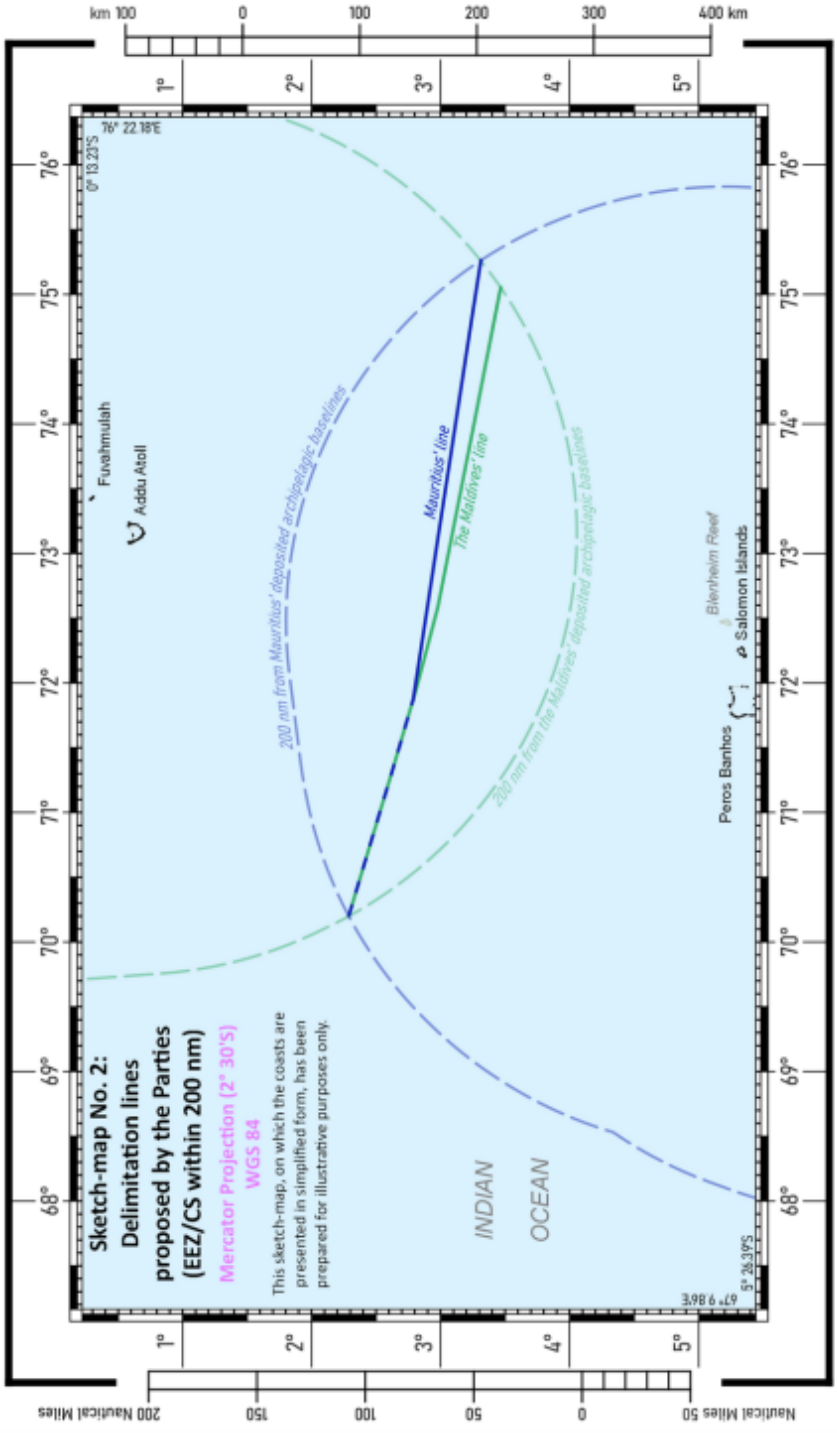


그림 출처: Impakter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그림 5. 관련 해안 (노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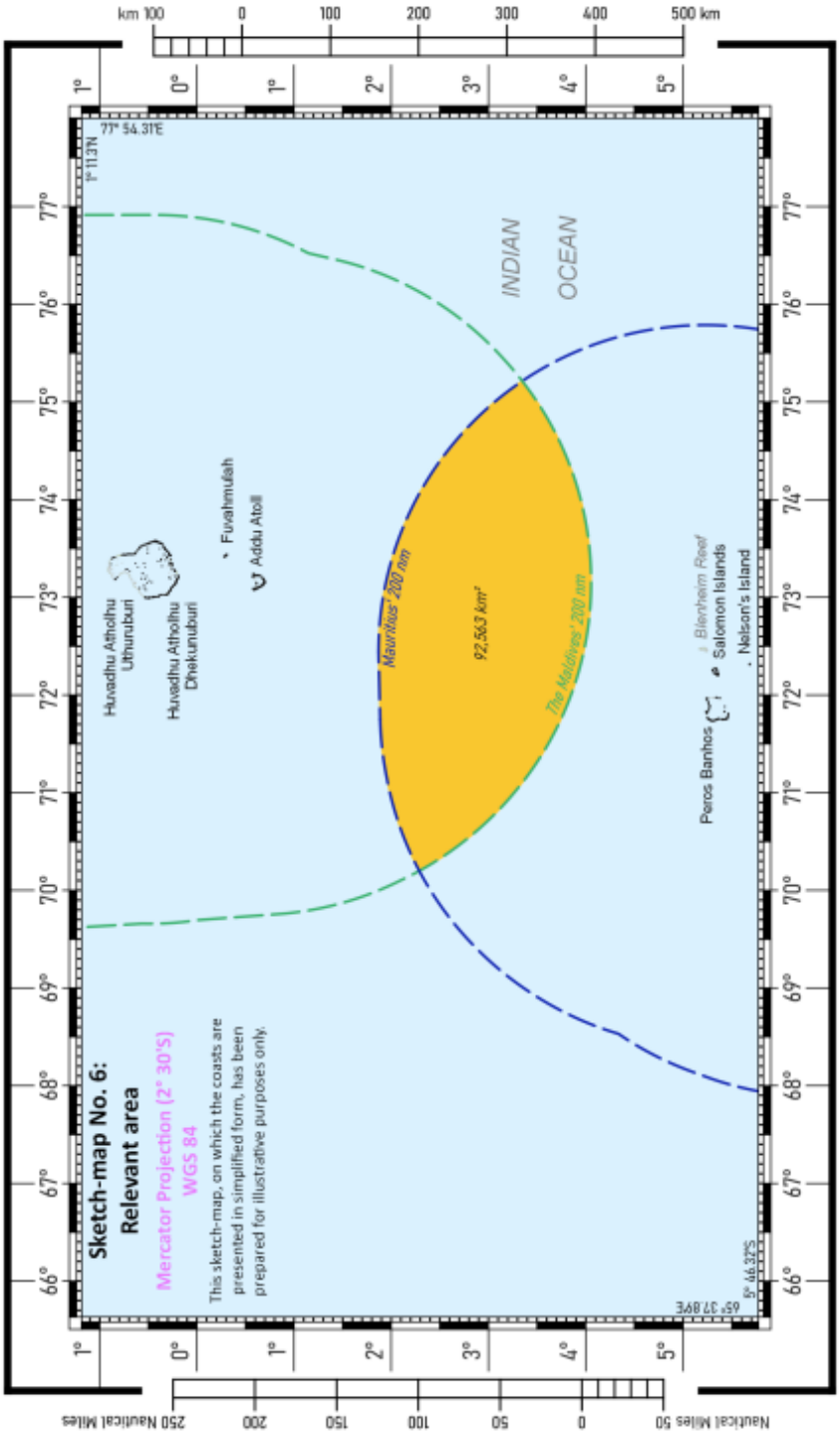


그림 출처: Impakter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그림 6. 최종 경계획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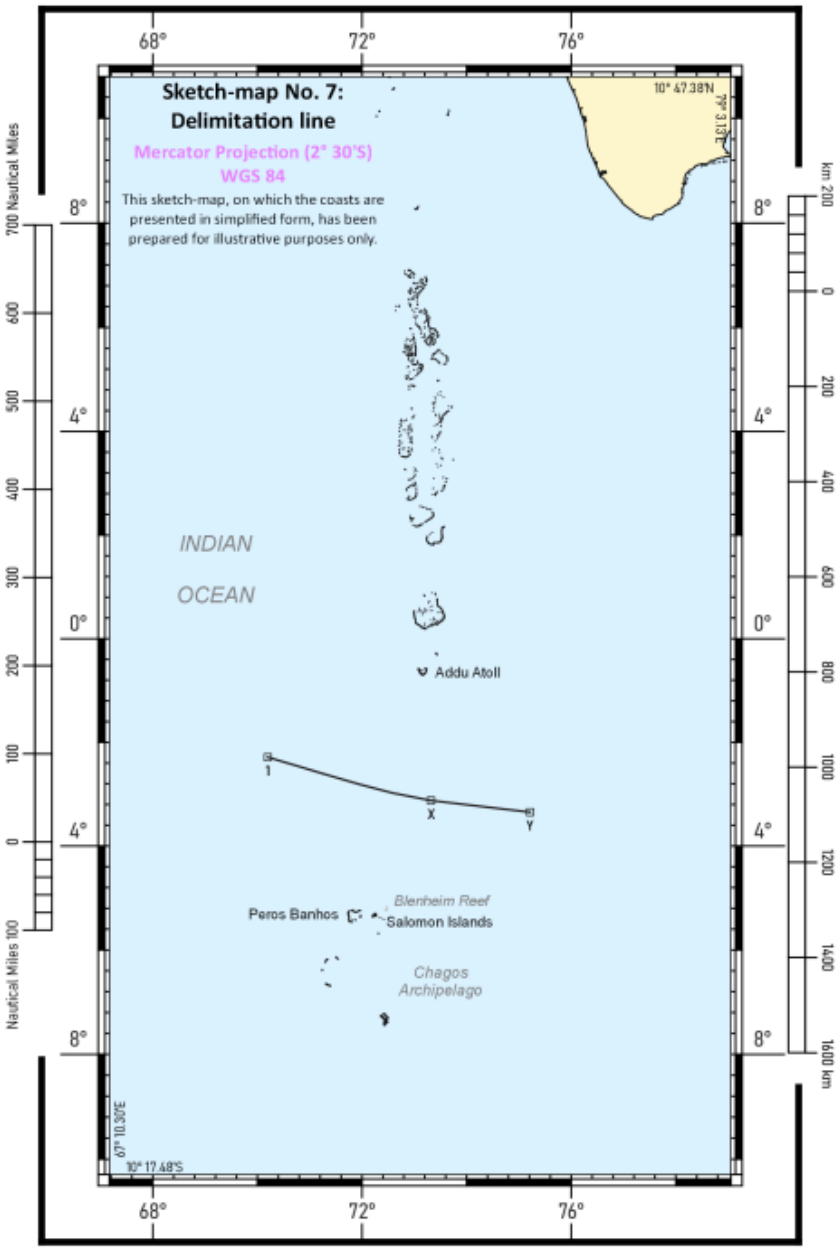


그림 출처: Impakter

또한, 재판부는 ITLOS 특별재판부가 양 당사국 간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았으며, 200해리 이원 대륙붕 정보에 대한 모리셔스의 CLCS 제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몰디브의 이의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다만 특별재판부는 차고스 제도 북부지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모리셔스의 권원을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것을 확인하고,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관한 경계획정을 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사건의 경과

2019년 9월 24일,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Special Chamber of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에 회부되었다. ITLOS는 2019년 9월 27일자 명령을 통해 백진현 재판장 외 6명의 재판관과 양국이 선출한 2명의 임시재판관, 총 9명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였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한국의 백진현 ITLOS 소장을 비롯해 카보 베르데 공화국의 Jose Luis Jesus 재판관, 프랑스의 Jean-Pierre Cot 재판관, 일본의 Shunji Yanai 재판관, 알제리의 Boualem Bouguetaia 재판관, 아이슬란드의 Tomas Heidar 재판관, 인도의 Neeru Chadha 재판관과 Bernard Oxman, Schrijver 임시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ITLOS 규정(Statue of the ITLOS) 제15조 [특별재판부]

1. 재판소는 특정한 종류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판소에 회부된 특정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재판부의 구성은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약식절차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정을 매년 구성한다. 특정한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재판관과 교대하기 위하여 2인의 재판관이 선정된다.
4.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쟁은 이 조에서 규정된 재판정에 의하여 심리되고 결정된다.
5. 이 조와 이 부속서 제14조에 규정된 재판정이 내린 판결은 재판소가 내린 것으로 본다.

ITLOS 규칙 (Rules of the ITLOS) 제30조

1. ITLOS 규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정분쟁을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요청은 절차가 성립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 당사자에 의한 요청이 접수되면 재판소장은 타방 당사자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재판소장은 재판부 구성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재판소에 보고해야 한다.
3. 재판소는 양당사국들의 승인을 받아, 재판부를 구성할 회원들을 결정해야 한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절차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또한 회의의 정족수를 결정해야 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이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9년 12월 18일 몰디브가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의 관할권 여부와 수리적격(admissibility)에 관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을 제기하여 본안소송 절차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28일 재판소가 몰디브의 항변을 기각하고 재판부의 관할권과 수리적격을 인정하면서 본안절차가 재개되어 2023년 4월 28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의 특징

동 사건은 방글라데시-미얀마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가나-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이어 ITLOS에 회부된 세 번째 해양경계획정 사건일 뿐만 아니라 차고스 제도의 영유권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혼합분쟁(Mixed Dispute)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모리셔스는 영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는 차고스 제도를 자국 영토라고 전제하고 소를 제기하였다. 모리셔스 본섬에서 200해리 경계획정을 할 경우 몰디브와 중첩수역이 발생하지 않지만, 차고스 제도에서 200해리 경계획정선을 긋는 경우, 몰디브와 중첩수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리셔스는 차고스 남부지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한계 연장 신청을 UN CLCS에 제기한 바 있다. 즉 이번 사건은 해양경계획정이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시되었지만, 선결적으로 차고스 제도의 영토 주권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혼합분쟁의 성격을 지닌다.

* 차고스 제도는 모리셔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분리되어 영국의 식민지로 남겨진 영토이다. 이에 대해서 모리셔스는 영국에게 지속적으로 차고스 제도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모리셔스는 영국을 상대로 영국이 연안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고스 제도 인근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2010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ICJ가 차고스 군도 관련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출처 : [1] ITLOS, 2023년 4월 28일,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Mauritius and Maldives in the Indian Oceans (Mauritius/Maldives), Judgment" [2] Republic of Mauritius, 2022년 4월 14일, Reply of Mauritius [3] Republic of Maldives, 2022년 8월 15일, Rejoinder of the Republic of Maldives [4] ITLOS, 2023년 4월 28일, Press Release [5] Gaver. C. D., July 2021,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Mauritius and Maldives in the Indian Ocean (Mauritius/Maldives)

국제해저기구

전문연구원 민영훈

ISA, 7월부터 광물개발을 위한 잠정 승인 신청서 접수 시작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는 오는 7월 나우루에서 제기한 유엔해양법협약상 "2년 규칙"이 만료됨에 따라 해저광물개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잠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SA 이사회는 지난 3월 자메이카에서 회의를 가지고 회의 결과 초안에서 이 같은 사항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어느 한 국가가 해저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ISA 이사회는 해저개발 관련 규칙과 규정을 신청 또는 신청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 채택 완료해야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나우루는 2021년 6월 ISA에 해저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오는 2023년 7월 9일 ISA 이사회는 해저개발 관련 규칙과 규정 채택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림 7. ISA 광물 규칙 개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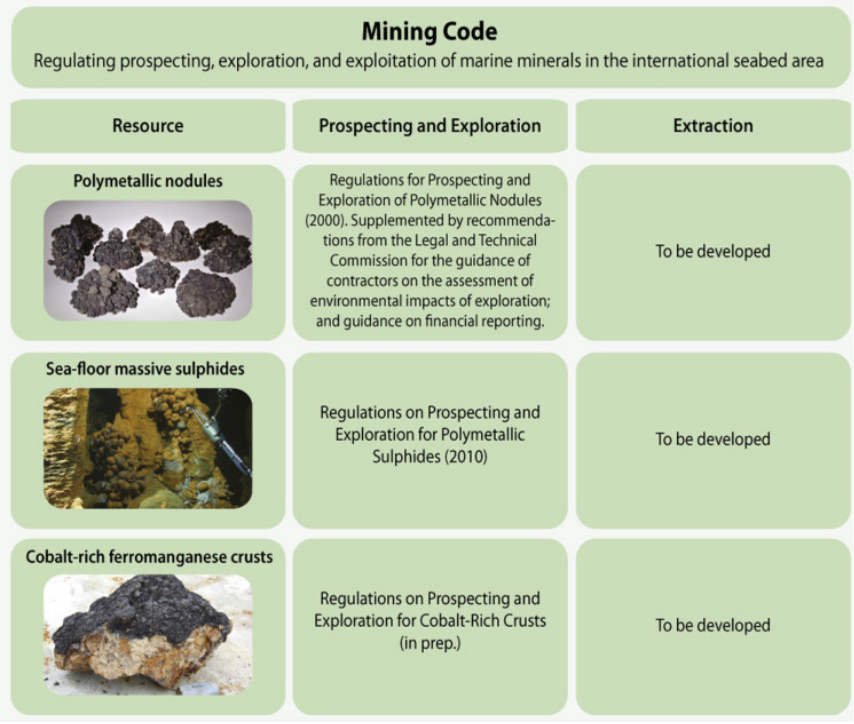


그림 출처: Impakter

국제해저기구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ISA가 개발 규정(Exploitation Regulations)을 채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ISA 이사회는 지난 3월 회의 이후 개발 규정 초안에 대한 더 많은 논의를 위해 다양한 비공식 작업반과 회기간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작업반에서 개발 규정 초안의 개정에 대한 논의 결과를 오는 5월 15일에 ISA로 제출할 예정이며, 회기간 작업반은 그 논의 결과를 6월 1일에 ISA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작업반들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ISA 이사회에서 개발 규정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ISA는 3월 회의 결과에 따라 7월 10일부터 해저 개발 기업으로부터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을 것으로 보인다. ISA 이사회는 현재 7월 전 이와 관련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연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는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ISA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ISA내 법률기술위원회(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이하 LTC)가 그 승인 결정에 대해 LTC의 관리 기구인 ISA 이사회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LTC 위원들 외에 구체적인 자료에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승인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는 승인을 위해 약 50만불을 ISA에 지불해야함으로 이를 승인하는 기구인 ISA 자체적으로 승인을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현재 개발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발활동에 대한 ISA의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도 이슈가 되고 있다. ISA내 개발활동에 대한 독립감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데 많은 회원국이 동의하였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구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7월부터 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이 잠정적 승인이 되고 개발업자가 심해저 광물 개발을 실시할 경우, 개발로 인한 생태학적 피해, 광산활동 모니터링 등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관리 기능 부재는 불법적인 개발 활동에 대한 규제를 어렵게 하고, 심해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보상 혹은 복구 절차 또한 취하기 어렵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해저 광물 개발업자 중 하나인 Metal Co.은 심해저 광물 개발 중 환경 피해와 위협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며, AI를 통해 심해 생태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 또는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

국제해저기구

고 보상해야 하는 개발업자가 자신의 활동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지 현재까지도 논란이다. 특히 심해 채광의 경우, 현재의 기술을 고려할 때 수중 지뢰를 활용하거나, 채광시 해저 퇴적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심해저 환경을 변경시키고 심해저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개발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심해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독립된 기구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림 8. 심해저 채굴을 반대하는 그린피스 활동



그림 출처: Reuters

현재 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활동을 규율하는 기구는 ISA가 유일하다. 그리고 관할권 이원의 심해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인류공동유산으로 모든 인간에게 유익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ISA는 모든 인간을 위해 심해저를 보존하는 임무와 개발을 관리하는 업무를 동시에 부담한다. 특히, ISA는 심해저 개발의 이익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기 위해, 심해저 과학·기술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샵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ISA의 유일성을 고려할 때, 심해저 개발 활동 관리에 관한 ISA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가 법적 장치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7월부터 사업계획 잠정 승인 신청을 받게 된다면, 관리 및 제도 공백 속에 무분별한 심해저 개발이 우려된다. 현재 ISA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올해 2차 이사회 회기가 정해져 있으며, 그 전에도 심해저 개발 사업계획에 관한 7월 비공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년 규칙”의 만료일이 올해 7월 9일이라

국제해저기구

하더라도, ISA 이사회는 회원국가 이견을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물론 7월 10일 이후 접수되는 개발 사업 계획의 잠정 승인에 관한 신청이 LTC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ISA가 유일한 심해저 활동 관리 기관인 동시에 심해저의 인류공동 유산의 가치를 고려할 때, 다가오는 7월 ISA 이사회의 회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1] Impakter, 2023년 4월 14일, Deep-Sea Mining: Disater for the Planet or Sustainable Solution? [2] ISA, 2023년 5월 12일, The 28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3] Reuters, 2023년 4월 4일, UN to Start taking deep-sea mining applications this July.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중국 해군, 74주년 기념식에서 항모·대형구축함 추가 계획 밝혀

중국은 4월 23일 해군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세 번째 항공모함(항모)인 푸젠(福建)함의 동력과 계류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앞으로 항모를 추가로 건조하고 1만 톤 급 대형 구축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글로벌타임즈)는 중국 군사전문가인 숭중핑(宋忠平)의 말을 인용해, 현 상태로라면 푸젠함이 올 하반기에 해상에서 운행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7년 이전에 항공모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2035년까지 총 6척을 보유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총 11척의 항모를 운영 중인 미국을 앞서는 것이 목표라고 분석했다.

푸젠함은 중국이 처음으로 자국 기술을 활용해 건조한 항모이며, 전자식 발사기(catapult)를 장착했다. 2015년 3월 건조를 시작해 중국 해군 창설 73주년 기념일에 맞춰 지난해 4월 23일 진수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 봉쇄로 인해 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다소 늦은 6월 17일 진수됐다. 푸젠함 외 제1, 2호 항모는 각각 라오닝함과 산둥함이다. 라오닝함은 1998년 구소련(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낡은 항모를 개조한 것이고, 산둥함은 랴오닝함을 모방한 것이다.

그림 9. 중국 해군 호위함인 다칭함과 미사일 구축함인 카이펑함



그림 출처: 新华网

아시아

중국

중국은 2000년대 이후 특히 군함 확장을 가속화 하는 한편, 해군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처(CRS)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구축함 보유량이 21대였으나 2021년에는 32대로 증가했다. 전체 군함 수도 2005년 216대에서 2021년 348척으로 132척 급증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군함 수는 296척으로 중국보다 52척 적다. 2015년부터 중국 해군이 군함 수 기준으로 미국 해군을 앞섰다.

이밖에 중국은 기존의 '근해방어전략'을 '원해방어전략'으로 전환하고 원해 작전 인력 훈련을 강화해 왔다.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은 중국의 근해를 버하이(발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해역으로 정의한다. 즉, 원해방어전략은 이 해역을 넘어선 태평양과 인도양 등을 가리킨다. 실제로 환구시보는 최근 2호 항모인 산둥함이 2019년 12월 취역 후 최초로 제1도련선(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섬) 밖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작전 가능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해외 투자와 해외 체류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해군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한편, 중국 해군은 이날 74주년 기념식을 위해 21일부터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등 22개 도시에서 병영 개방 활동을 진행하고, 주요 군함인 구축함·호위함·미사일 고속정·측량함·의료선 등 28척의 함정을 편성해 칭다오항에 전시했다.

그림 10. 중국 3호 항모, 푸젠함



그림 출처: Global Times

출처 : [1] Global Times, 2023년 4월 23일, "PLA Navy's 3rd aircraft carrier Fujian holds propulsion tests; more Chinese carriers to be built" [2] 新华网, 2023년 4월 23일, "人民海军开展多项主题活动纪念成立74周年"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욱·김 주 형

중·일, '제15회 해양업무 고위급 협상' 회의 개최

중국과 일본이 4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제15회 해양업무 고위급 협상' 회의를 개최하고 군사안보, 해상 법 집행, 해양경제 3개의 실무그룹으로 나눠 회의를 진행했다. 이 협상은 중·일 양국이 해양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해 마련한 연례 회담으로 지난 2012년 처음 개최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회의가 개최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회의는 중국 외교부 변경 및 해양업무국 홍량(洪亮) 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후나코시 다케히로 국장이 공동 주관했다.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외사공작위원회판공실·국방부·자연자원부·교통운수부·농업농촌부·국가에너지국·중국해경국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내각부·국가안전보장국·환경성·국토교통성·방위성·수산청·자원에너지청·해상보안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림 11. 제15차 중일 해양업무 고위급 협상 회의



그림 출처: 中国海警局

대만·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원전오염수 문제에 이견 드러내

양국은 올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5주년을 맞은 만큼 원칙에 따르고 대화를 통해 해양 관련 갈등과 분쟁에 대처하고 해양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양국 간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중국 중앙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은

아시아

중국

동중국해와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대만문제에 일본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활발해지는 군사활동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우선 중국의 해경선이 센카쿠 제도 주변의 일본 영해에 침입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동중국해 정세와 남중국해 정세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단행한 직후 이번 해양업무 고위급 협상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일본 대표단이 특히 대만해협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2022년 8월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전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최초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단행하고 일본 EEZ를 포함한 근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올해 4월 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미 수교국 방문 후 미국을 경유하며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회견하자 중국은 또 다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동중국해 자원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2022년 중국이 2기의 구조물을 새로이 설치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화퇴 주변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대응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양국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일본은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는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 함과 동시에 중국 측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 결과로 양국은 다음 여덟 가지에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측은 국방 부문 간 서로 해·공(海空) 직통전화를 개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조속히 사용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또한 해·공 연락 메커니즘을 한층 더 완비하고 국방 부문 교류를 지속해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둘째, 중국 해경국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제 해상범죄 단속, 양국 해경 연락 역할 강화, 해상 법 집행 관련 다자 협력 메커니즘 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하고, 계속해서 해상 법 집행 인력과 해경 교육기관 간 교류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

셋째, 양국은 해상 구조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중·일 해상구조협정」에 근거해 관련 실무 협력을 심화하며, 양국 지방정부가 해상 구조기관 간 통신 훈련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시아

중국

그림 12. 일본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 국장과 중국 외교부 홍량 국장



그림 출처: Japan Times

넷째, '2023년 중일 해양쓰레기 협력 전문가 대화 플랫폼 제4차 회의 및 제4회 중-일 해양쓰레기 세미나'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 틀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응을 위한 실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섯째, 「중·일 어업협정」을 전면 이행하고 중·일 어업공동위원회 업무를 조속히 재개하며, 불법 어업 단속과 북태평양 어업자원 보호, 장어자원 보호 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는 데 동의한다.

여섯째, 해양 과학연구, 해양생태 보호·복원, 블루이코노미 혁신기술 개발 등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부문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

일곱째, 양국 외교부 해양 관계자의 상호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 관련 싱크탱크와 학술 및 교육 기구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지하는 데 동의한다.

여덟째, 양국은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중국에서 제16회 중일 해양업무고위급 협상 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

아시아

중국

그림 13. 일본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 국장과 중국 외교부 홍량 국장



그림 출처: Japan Times

한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다음 여덟 가지에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측은 국방 부문 간 서로 해·공(海空) 직통전화를 개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조속히 사용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또한 해·공 연락 메커니즘을 한층 더 완비하고 국방 부문 교류를 지속해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둘째, 중국 해경국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제 해상범죄 단속, 양국 해경 연락 역할 강화, 해상 법 집행 관련 다자 협력 메커니즘 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하고, 계속해서 해상 법 집행 인력과 해경학교 간 교류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

셋째, 양국은 해상 구조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중·일 해상구조협정」에 근거해 관련 실무 협력을 심화하며, 양국 지방정부가 해상 구조기관 간 통신 훈련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넷째, '2023년 중일 해양쓰레기 협력 전문가 대화 플랫폼 제4차 회의 및 제4회 중-일 해양쓰레기 세미나'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 틀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응을 위한 실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동의한다.

다섯째,「중·일 어업협정」을 전면 이행하고 중·일 어업공동위원회 업무를 조속히 재개하며, 불법 어업 단속과 북태평양 어업자원 보호, 장어자원 보호 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는 데 동의한다.

아시아

중국

여섯째, 해양 과학연구, 해양생태 보호·복원, 블루이코노미 혁신기술 개발 등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부문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

일곱째, 양국 외교부 해양 관계자의 상호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 관련 싱크탱크와 학술 및 교육 기구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지하는 데 동의한다.

여덟째, 양국은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중국에서 제16회 중일 해양업무고위급 협상 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

그림 14.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그림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출처 : [1] Japan Times, 2023년 4월 11일, Japan urges peace in Taiwan Strait as Beijing simulates attack [2]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2월 21일, "Diaoyu/Senkaku islands dispute" [3] 环球网, 2023년 4월 10일, “中日举行海洋事务高级别磋商机制第十五轮磋商” [4] 中国海警局, 2023년 4월 13일, “中日举行海洋事务高级别磋商机制第十五轮磋商” [5] 外務省, 2023년 4월 10일, 第15回日中高級事務レベル海洋協議（結果）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 욱

중국, 해양법 교육 및 해양 전문 인재 강화 방침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신시대 법학 교육 및 법학 이론 연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을 공표한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법학 교육과 법학 이론 연구는 법치 국가 건설을 위한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기본을 건설하고 중국특색 및 세계일류의 로스쿨을 건설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법학 전문가와 학자들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해당 '의견은' 세부적으로 △정확한 정치 방향, △법학 교육기관(학교) 체계 개혁, △법학 교육 체계 개선 가속, △법학 이론 연구 체계 창조와 발전, △조직 리더십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했다. 특히 '법학 교육기관(학교) 체계 개혁' 부분에서는 중국의 현실에 입각해 법학 기초 학문을 쇄신하고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통합되도록 하는 한편, 기후법학, 해양법학 등 신흥 법학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중국의 '법률전' 강화 우려도…

이에 대해 해양정책 전문 애널리스트인 마크 발렌시아(Mark J. Valencia)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국제법 역량 강화 결정은 국제법 준수 필요성을 수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법, 특히 해양법을 활용하는 서구 열강들을 모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그는 중국이 해양 분쟁에 있어서 대상국을 위협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다른 서구 열강처럼 법률의 전략적 사용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존중 의무에 관한 유엔헌장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만약 중국의 정치적 동기가 법학 교육 강화 및 인재 양성에 반영된 것이 맞다면 향후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해양 분쟁에서 중국의 '법률전(lawfare)'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법률전은 국제법을 국익 추구의 수단, 즉 법의 정치화를 일컫는 말로, 법률을 제정 또는

아시아

중국

개정, 해석 및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국가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실제로 중국은 2021년 초 해경법을 제정, 발효하는 등 해상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5.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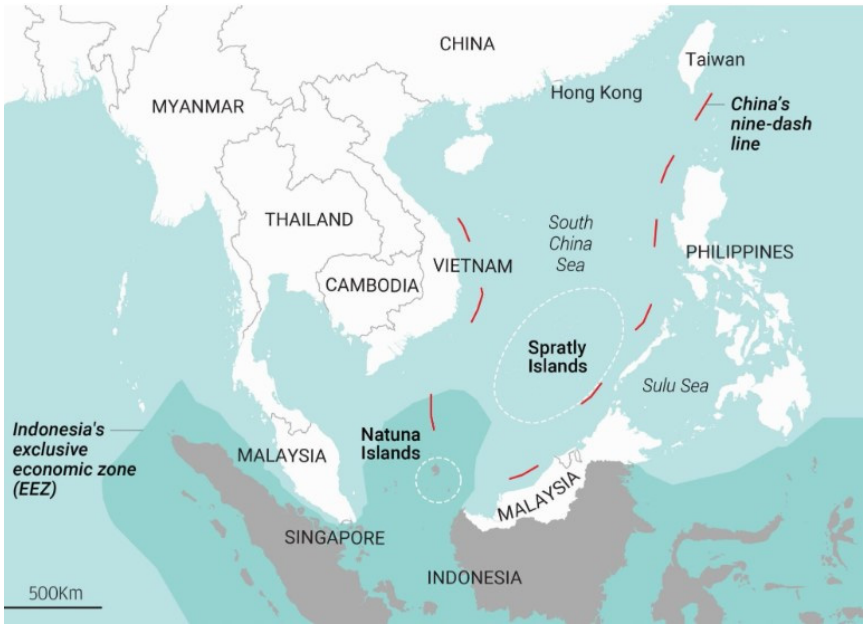


그림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출처 : [1] 김상걸(2021),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으로서의 법률전(Lawfare)의 맥락과 개념” 아주법학, 15(1) [2]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년 3월 20일, "After South China Sea setback, Beijing seeks to arm itself with international law – like the West" [3] 人民日报, 2023년 2월 27일, "中办国办印发《关于加强新时代法学教育和法学理论研究的意见》"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 AUV 전략 방향성 제시

1. 배경 및 구성

기기 본체가 자율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전자동으로 수중 항행할 수 있는 로봇인 자율형 무인탐사기(AUV)에 대해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심해 순항탐사기 '우라시마'를 비롯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AUV를 해양자원개발, 해상풍력발전, 해양안전보장 등 여러 방면에 활용함으로써 인력투입을 줄이는 한편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해양의 가시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종합적인 해양안전보장과 지속가능한 해양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해양입국을 표방하는 일본으로서 해양의 산업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에서의 실용화를 구현하기 위해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에서는 AUV 전략팀을 설치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1월 23일 개최된 1회 회의에서는 AUV 관련 관계 정부부처의 조직과 해양산업 실무작업반 검토, 2월 27일 개최된 2회 회의에서는 민간 및 학계 조직과 해양연구개발기구 검토한 바 있다. 3월 29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AUV의 국산화, 산업화를 위한 AUV 전략 책정을 검토했다. 중간보고회의 참여 구성원은 종합해양정책본부,내각부 · 문부과학성 ·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 · 해상보안청 · 환경성 · 방위성 등 관계부처의 관계자와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이다. AUV 전략 방향성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AUV 전략의 방향성

(1) 민관 플랫폼의 형성

AUV의 이용 실현을 위해서는, 개발과 이용에 있어 기업, 대학, 공기관, 관계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관련 논의와 전략 수립, 공통기반 구축 등 대응을 위한 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참가자로 구성되는 관민 플랫폼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2) 장래 비전 작성

AUV를 이용하는 해양 산업의 규모와 시장이 작은 일본의 현실에서 AUV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 · 이용에 대산 장래 비전을 공유하고 AUV 기술의 다의성을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래 비전에는 해양자원개발, 해상풍력발전, 해양관측 · 감시, 과학조사, 심해

아시아

일본

및 극지 연구, 해양환경보호, 방재, 해양안보 등 해양 분야의 미래 의제를 위해 저비용 혹은 고성능 AUV를 포함한 다양한 AUV가 민간과 안보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포함된다.

(3) AUV 기술지도 작성

AUV 탑재 부품 대부분이 수입품인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이 가진 주요 기술을 분석하고 국산화를 위한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성과와 해외동향 파악을 바탕으로 AUV와 주변기기의 주요 기술과 기술 동향을 보여주는 기술지도를 작성한다. 다만, 기술지도 공개할 경우, 일본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부품을 포함해 완전한 국산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동맹국과 동지국의 기술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공통 기반 구축

수요가 세분화되고 개별 분야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표준화를 하기 어려운 국내 환경이다. 그러나 비경쟁영역에서는 공통기반을 구축해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의 규격화를 대비해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의 공통화나 호환성을 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업체의 진입이 용이해져 국산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용도 차이나 기술 진전에 따라 탑재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운용시스템의 패키지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한 솔류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규격 공통화를 통해 국제 규격 책정을 주도한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 제도 환경 정비

현재 일본해역에서는 AUV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해역을 선정하거나 해역 이용 조정이 필요해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약없이 자유롭게 운영가능한 시험장, 인재 육성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AUV 운용 규범·규칙 검토, 산업경쟁력 확보나 안보 측면에서 지적재산 등의 기술정보와 수집한 데이터의 공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6) 기업활동 촉진 정책

AUV 관련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비전, 기술지도, 로드맵 작성을 통해 자국산 AUV의 특성과 우위를 밝히고 시장 개척 실시 분야에 대해

아시아

일본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촉진 방안으로 해외 확장 지원이나 스타트업 지원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때 안전보장무역관리 하에서의 수출제한에 관한 실태나 해외 스타트업 지원 선진사례 등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해석을 포함해 AUV 운용 기술을 숙련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전문가 집단이 다양한 해양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활용 및 육성을 검토한다. 이는 AUV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의 부가가치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7) 연구개발의 추진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AUV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I, 양자역학 등 신기술과 환경 오염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생가능한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론트 로딩을 염두에 두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계부처에서 정보교환, 공동연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6. AUV 포함 해양 로봇 공학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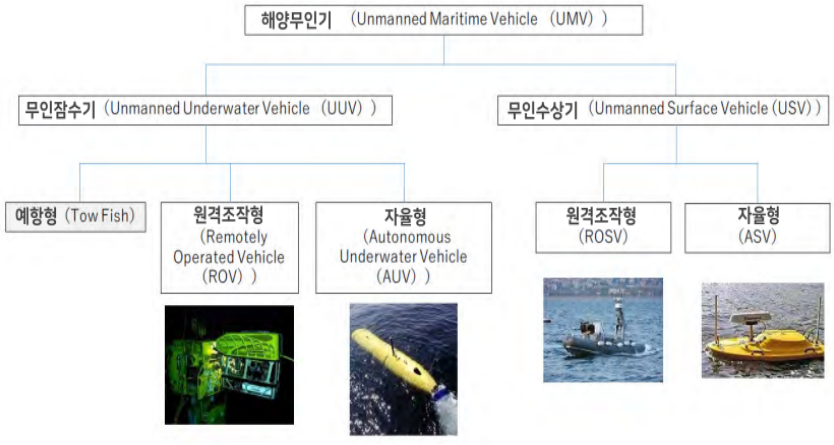


그림 출처:
総合海洋政策本部参与会議,
自律型無人探査機（AUV）戦略プロジェクトチーム）中間とりまとめ

출처 : [1] 総合海洋政策本部参与会議, 2023년 4월, 自律型無人探査機（AUV）戦略プロジェクトチーム）中間とりまとめ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2023년 일본 외교청서 공개

4월 11일 '2023년판 외교청서'가 공개되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이 실시해 온 외교 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1957년 9월 제1호 발간 이래 매년 발행하고 있다.

2023년 자료는 2022년 자료와 비교해 큰 흐름에서는 변화는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1년간 진행한 외교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반영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지역별 외교에서 유럽과 일본과의 협력 강화 특히 NATO와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중요해진 점과 유럽 각국과 일본 간 진행된 안전보장 · 방위 협력에 대해서 특집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제3장은 2022년의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일본'에서 2023년판에는 '국익과 세계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외교'로 제목을 바꾸고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담고 있다.

일본 외교의 전망에 대한 부분에서는 2022년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먼저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자국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안보와 관련한 문서의 개정이 중요함을 제시했다.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한편 2023년판에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 · 강화라는 제목하에 동지국과의 연대강화, 법에 근거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대, 국제기능 강화를 먼저 서술하고 그다음으로 안전보장상의 대응으로 미일동맹 강화, 동지국 · 동맹국과의 연대강화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별 외교에 관한 서술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며 대북 대응 등을 염두에 두어 안전보장 측면에서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이후 16년간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제2절 아시아 대양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 독도 문제 등에서 일본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으나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대 추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아시아

일본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독도 주변에서 실시된 우리나라의 해양조사 활동과 군사훈련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것도 서술되어 있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하며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독도를 계속 불법 점거해 오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번 외교청서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하여 이와 같은 외교청서의 독도에 관한 주장에 항의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역시 외교청서에서 북방영토는 일본이 주권을 가진 섬이며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명기한 데 대해 외교청서에 반발하고 쿠릴 열도는 러시아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외교청서 내용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였고 2022년 쿠릴 열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동식 해안 방어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일본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러시아와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 : [1] 外務省, 2023년 5월 2일, 外交青書 [2] Yahoo Japan, 2023년 4월 11일, ロシアが『外交青書』に反発…"北方領土は日本固有の領土　ロシアが不法占拠"に「この種の表現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不快感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 주 형

일본, 제4기 해양기본계획 결정

4월 28일 각의에서는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일본의 해양정책의 지침이 될 '제4기 해양기본계획'을 결정했다. 해양기본법이 2007년 4월 20일 정식 시행되고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 제1기, 2013년 4월 제2기, 2018년 5월 제3기 해양기본계획 등 5년간의 해양정책을 제시하는 일련의 기본계획이 결정되었다.

그림 17. 해양기본계획 결정 과정 및 제4기 해양기본계획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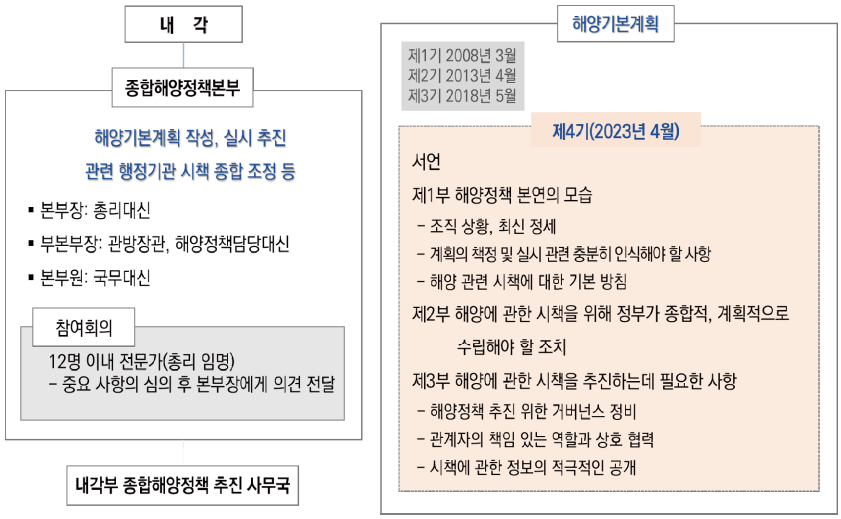


그림 출처: 内閣府, 海洋基本計画 참고하여 저자 편집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일본 주변 해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해양에 관한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의 발단이 된 에너지 확보, 산업구조의 전환 등 세계 전체가 경제 구조와 경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양정책의 큰 변혁 즉, '오션 트랜스포메이션'(Ocean Transformation)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인식한다.

정책의 방향 설정으로는 해양 자원개발 등 신산업 육성 및 기존산업의 발전, 환경관련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 등으로 대응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계획의 주요 기둥이었던 '종합적인 해양의 안전보장'과 함께 탈탄

아시아

일본

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양구축'을 새로운 기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세부 시책으로 해양 산업이용 촉진, 충실한 과학적 지식 확보, 해양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 북극정책 추진, 국제연대·협력, 해양인재 육성·확보와 국민 이해 증진·감염증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일곱 가지 시책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해양 자원개발 등 신산업 육성 및 기존산업의 발전, 환경 관련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 등으로 대응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계획의 주요 기둥이었던 '종합적인 해양의 안전보장'과 함께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양구축'을 새로운 기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국 해경국 선박이 일본의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에 있어 해양에 관한 국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한 해상 보안능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순시선이나 항공기의 정비와 함께 무인기 등 최신 기술 활용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외국의 해상 보안 기관과 연대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대응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전자동으로 수중을 항행하는 수중 무인기(AUV) 보급을 위한 전략을 올해 내에 책정하기로 하였다. 안전보장이나 해양 인프라의 관리에 이용되는 AUV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유사시 방위대신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대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훈련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일본 근해의 메탄하이드레이트 희토류 등을 귀중한 국산 자원이라고 하며 산학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자원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탈탄소화에 관해서는 탈탄소 대처를 해양산업 성장으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해상풍력발전 도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을 제시하고 부유식 설비를 도입한다는 목표 설정도 제안했다. 수소나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수입·저장할 수 있는 항만 탄소 중립 포트'의 계획적인 정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 등도 포함되었다. 그 밖에 2022년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관광선 침몰 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구조와 구급체제를 확충해 나갈 방침 등도 담고 있다.

이런 해양 정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정책 추진 거버넌스 정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세부 사항으로 종합해양정책본부 및 참여회의 등 협의체의 기능 강화, 종합해양정책 추진 사무

아시아

일본

국의 인원과 예산 증가를 통한 기능과 체제 강화, 연도별 중점 시책에 대한 효율적 공정관리 및 진척상황에 대해 KPI 등 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제시했다. 아울러 관계자의 책임 및 협력, 해양정책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제시한다.

그림 출처: 内閣府, 海洋基本計画 참고하여 저자 편집

그림 18. 제3기 및 제4기 해양기본계획 비교

	제 3기	제4기
방향성	새로운 해양입국에의 도전	해양정책의 큰 변혁·오션 트랜스포메이션
	종합적인 해양 안전보장	▪ 종합적인 해양 안전보장 ▪ 지속가능한 해양의 구축
주요시책	(1) 해양의 산업적 이용 촉진 (2) 해양환경의 유지, 보전 (3) 과학적 지식의 충실 (4) 북극정책의 추진 (5) 국제연대·국제협력 (6) 해양인재의 육성과 국민의 이해증진	(1) 해양의 산업적 이용 촉진 (2) 과학적 지식의 충실 (3) 해양의 디지털 전환 추진 (4) 북극정책의 추진 (5) 국제연대·국제협력 (6) 해양인재의 육성과 국민의 이해증진 (7) 감염증 대책

출처 : [1] 内閣府, 2023년 4월 28일, 海洋基本計画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일본 방위성, 해상보안청의 통제요령 마련

방위성은 자위대법 제80조에 근거해 무력공격 사태 발생시 방위대신이 국토교통대신 산하의 해상보안청을 지휘하에 두는 절차 등을 규정한 '통제요령'의 개요를 4월 28일 공개했다. 향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책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제요령은 유사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을 연계하기 위한 첫 운용지침으로, 방위대신이 해상보안청 장관을 지휘하고, 해상보안청이 해상에서의 수색·구난이나 국민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대 및 협력 강화는 오랫동안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수립하고 양 기관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명시한 바 있다.

유사시 해상보안청의 역할은 국민 보호조치나 해상에서의 인명보호 등이 중심으로 특히 주민대피에 대해서는 비군사조직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우려 등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일본은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내용 조율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행동을 할 경우, 해상자위대가 전면에서 방위 역할에 전념하고 해상보안청은 피난민을 수송하거나 민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후방지원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방위대신이 해상보안청 조직을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아니고 해상보안청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해상보안청 장관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이다. 해상보안청의 독립성을 존중해 실제 순시선 운용 등은 실무에 정통한 해상보안청 장관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해상보안청의 인사, 재무 등은 국토교통대신이 지휘감독한다.

이로써 내각총리대신은 무력공격 사태에서 방위출동 명령 시, 방위성·자위대와 해상보안청과의 통상적인 협력관계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할 경우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상보안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위대신의 통제 하에 둘 수 있게 되었다. 방위대신 통제 하에서도 해상보안청의 임무, 소관 사무, 권한 및 비군사적 성격에는

아시아

일본

변경이 없기 때문에 해상보안청의 통제가 해상보안청의 자위대 편입이나 해상보안청의 준군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방위성은 명확히 했다.

이번 통제요령 마련을 통하여 방위성과 자위대에 집약된 정보를 토대로 통일되고 일원적인 지휘가 가능하게 되었고, 자위대와 해상보안청가 유지해 온 통상적인 협력관계 이상의 신속·적확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긴급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19. 방위성·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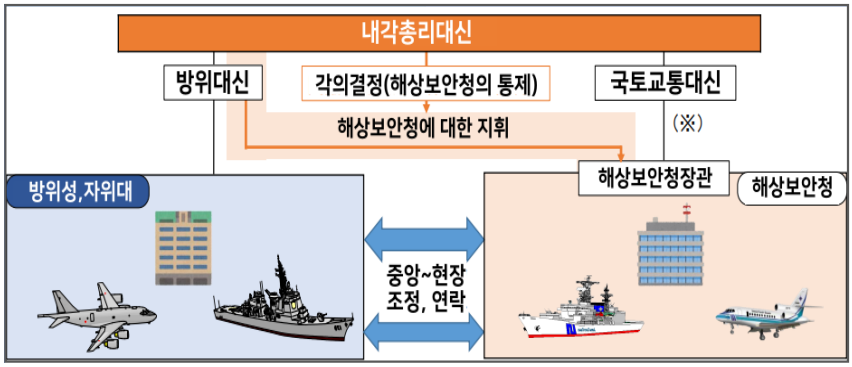


그림 출처: 防衛省・自衛隊, 海上保安庁の統制要領

출처 : [1] 防衛省・自衛隊, 2023년 4월 28일, 海上保安庁の統制要領 [2]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3년 4월 10일, 防衛相が海保長官を指揮、有事の「統制要領」概要判明

아시아

필리핀

전문연구원 이 서 희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 스프래틀리 군도 순찰 중 중국 함정과 대치

2013년, 필리핀은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을 포함한 남중국해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2016년 7월, PCA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영유권의 거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필리핀의 남중국해 370km EEZ 내 수역인 서필리핀해에서 어업 및 자원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2016년 PCA 판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전역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군사 전초기지를 지속적으로 확장 및 개발하고, 어선, 해상 민병대, 해안경비대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수백 척의 중국 해안경비대 및 기타 선박은 해당 해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타국의 어선과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그림 20. 남중국해 중국 군사기지 현황



그림 출처: 연합뉴스

아시아

필리핀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에 대한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스프래틀리 군도에 활주로, 항구,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군사 섬을 건설하였다. 필리핀 역시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는 중국에 대한 비판을 꺼려하였다. 그러나 작년 6월에 취임한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대통령은 필리핀 해양에 대한 중국의 권리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의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필리핀은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한 세컨드 토머스 암초[1]에서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자국 선박에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했다고 비난하며 항의한 적이 있었다. 필리핀은 자국의 영유권을 강화하고자 1999년에 고의로 정박한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녹슨 배인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호에 승선한 소수의 필리핀 군인들을 스프래틀리 군도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4월에 필리핀은 2014년 국방협력강화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에 따라 4개 공군기지와 1개의 육군기지 외 미국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4개 군사기지의 위치를 발표하였다.[2]

한편, 대만, 베트남을 비롯한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선박은 일상적으로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12마일 영해 한도 내에서 운항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 국가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 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은 난사군도이며 베트남명은 쯔엉사군도이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필리핀 팔라완 주에서 북서쪽으로 약 195km(121마일) 떨어진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하고 있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second thomas shoal)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명칭이며, 중국명은 런아이자오, 필리핀명은 아융인이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비롯하여, 아융인 암초(Ayungin Shoal), 사비나 암초(Sabina Shoal), 이로쿼이 암초(Iroquois Reef), 로악(Lawak), 파타그(Patag), 리카스(Likas), 파롤라(Parola), 에스코다 암초(Escoda Shoal), 델 필라 암초(Del Pilar Reef), 파그아사(Pag-asa), 티자드 뱅크(Tizzard Bank), 줄리안 펠리페 암초(Julian Felipe Reef)가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해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카라얀 군도(Kalayaan Group of Islands)로 불리기도 한다.

2) 2014년 4월에 체결된 국방협력강화협정은 미국-필리핀 간 동맹 강화를 위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리핀 기지에 미군과 필리핀 군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아시아

필리핀

필리핀과 중국 선박 간 대치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4일, 일주일 동안 BRP 말라파스쿠아(BRP Malapascua) 및 BRP 말라브리고(BRP Malabrigo) 두 척의 필리핀 해안경비대(Philippine Coast Guard, PCG)함정은 필리핀 서부 해상인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해상 지역에 대한 순찰을 시행하였다.[3] 이 두 함정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줄리안 펠리페 암초 근처에서 중국 해안경비대(China Coast Guard, CCG) 함정 2척을 비롯하여 중국 인민 해방군의 콜베트함 해군 함정,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2척, 사비나 숄(Sabina Shoal) 근처에서 18척의 중국 해상민병대(Chinese maritime militia, CMM)의 선박과 인민 해방군 및 해군의 초계함을 포함하여 100척 이상의 선박을 발견하였다. PCG는 무전을 통해 자국의 함정이 파그아사 섬에서 약 4해리 떨어진 곳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국 해상민병대의 선박 4척을 몰아냈다. 그러나 에스코다 숄(Escoda Shoal) 근처에서 발견된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 18척은 PCG 선박의 무전에 반응하지 않았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PCG 선박이 선체가 단단한 고무보트(Rigid Hull Inflatable Boats, RHIB)를 배치하고, 대규모의 중국 해상민병대에 분산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1일, 파그아사 섬에서 7해리(13km)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 제549호와 필리핀 해양경비대 함정인 BRP 말라파스쿠아(BRP Malapascua) 및 BRP 말라브리고(BRP Malabrigo)가 대치하였다.[4] 중국 함정 제549호는 무전으로 두 척의 PCG선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지역을 떠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PCG함정은 파가사 섬(Pag-asa Island) 영해 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답하며 대응하였고, 중국 해군에 그 지역을 즉시 떠날 것을 요청하였다.

4월 23일,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은 아융인 숄(Ayungin Shoal) 인근에서 BRP 말라파스쿠아와 BRP 말라브리고를 차단하였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중 한 척은 BRP 말라파스쿠아와 충돌할 뻔하였으며,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제5201호와 제4202호 두 척이 아융인 숄 근처에서 BRP 말라파스쿠아를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요격하였다.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제5201호는

3) BRP 말라파스쿠아(BRP Malapascua) 및 BRP 말라브리고(BRP Malabrigo)는 PCG의 순찰선이다.

4) 파그아사 섬은 국제적으로 티투 섬(Thitu Island)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 일부인 바위이다. 티투 섬으로도 알려진 스프래틀리 군도의 바위는 1970년대에 필리핀이 점령했으며 현재 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아시아

필리핀

BRP 말라파스쿠아와 50야드(46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였고,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제4202호는 700야드(640미터) 거리에서 BRP 말라브리고호의 움직임을 감시하였다.

그림 21. PCG와 CCG의 대치 상황



그림 출처: Ted Aljibe/ AFP

필리핀과 중국의 입장

4월 23일, PCG 대변인 타리엘라(Tarriela) 해군 준장은 이 사고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타리엘라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우선적으로 밝히면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제5201호와 제4202호가 필리핀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타리엘라는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타리엘라는 중국 군함의 존재,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CMM 선박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지속적인 출현, PCG 선박에 대한 중국 해경의 공격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필리핀군의 서부사령부와 서부지역대책반에 제출하였고, 영해에서 필리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필리핀 국민에

아시아

필리핀

밝혔다.

4월 23일 사건을 확인한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 테레시타 다자(Teresita Daza) 역시 우선 필리핀은 자국의 영해와 EEZ에서 일상적인 해상 순찰을 수행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두 선박의 일상적인 순찰 임무에 대한 중국의 간섭은 항행의 자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테레시타 다자는 중국에 유엔해양법협약상 필리핀 서해상에서 순찰을 실시하는 필리핀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하였다.

4월 28일 성명에서 PCG는 4월 21일과 4월 23일 두 번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과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 성명에서 필리핀은 배타적 주권, 주권, 영토, 대륙붕에 대한 필리핀의 배타적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PCG 선박에 대한 중국 선박의 감시는 필리핀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였다고 밝혔다.

필리핀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 상원 의원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더 우월한 중국 선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은 PCG를 칭찬하며 다가오는 6월에 분쟁 해역에서 육안적시진(ocular inspection)을 실시한 계획이라고 하였다.[5] 아울러 그는 필리핀 영해의 순찰과 외국 침략자로부터 필리핀 어민 보호를 위해서는 PCG 자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전 성명에서 에스타라다는 "PCG가 해양 안전, 보안, 수색 및 구조, 법 집행, 환경 보호의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국가 관할권 내에서 해양 국제 협약,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규정을 집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 3척의 연안 순찰선만으로는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PCG 선박이 중국의 허가 없이 침입했다고 하면서,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필리핀이 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마오 대변인은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은 법에 따라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질서를 수호했으며, 필리핀 선박의 위험한 접근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출처 : [1] ASIA&PACIFIC, 10 May 2023, More than 100 Chinese maritime militia vessels, warship still in West Philippine Sea-PCG [2] Philstar GLOBAl, 29 April 2023, PCG: Over 100 Chinese vessels spotted in West Philippine

5) 육안적시진이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적으로 전신증상 또는 개별적 증상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필리핀

Sea [3] ABSCBN NEWS, 28 April 2023, Over 100 Chinese militia ships spotted near Julian Felipe Reef, refused to leave: PCG [4] USNI News, 1 May 2023, Philippine Coast Guard Cutters, Chinese Warship Almost Collide in South China Sea [5] GOV.PH, 28 April 2023, PCG spots more than 100 Chinese vessels over 7 days in WPS [6] ALJAZEERA, 28 April 2023, Philippines reports 'confrontation' with China in South China Sea

북아메리카
미국

전문연구원 김소연

미국의 북극 경쟁과 대처 방안

오늘날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 가속화 등 북극의 환경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개척되고 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북극 내 천연 자원 개발에 몰두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북극항로를 통한 해상운송이 본격화되면, 운송시간 및 운항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항로개척으로 인한 물동량 역시 증대되므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북극지역을 따라 주요 군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사력을 광범위하게 확정해나가고 있으며 이외에도 군사 시험기지가 북극지역에 위치해있어, 이곳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충지로 꼽힌다. 오늘날 이러한 북극 환경 변화와 함께 북극을 둘러싼 새로운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강대국들은 북극지역에서 운항할 쇄빙선을 보유함으로써 북극 항로에서의 우위 차지에 나서는 등 주요 국가들 간에 일종의 북극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극권 국가 진입과 북극 정책

북극은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총 8개국의 영토에 걸쳐져 있다. 북극권의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를 위해 1996년에 설립된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는 이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등 13개 국가는 옵서버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1867년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북극권 국가가 되었다. 1959년 미국이 알래스카 지역을 미국의 주(州)로 포함하기 전까지 미국은 이 지역을 군사 및 안보구역으로 지정해오고 있었다.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북극지역에 주목하며 북극전략을 대통령 강령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미국의 주요 북극 정책은 출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주로 환경규제 강화 또는 자원개발 추진 사이에서 변화해왔다. 요컨대 오바마 정부 당시에는 북극의 환경 보호·관리 정책과 함께 2016년에는 북극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를 무기한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북극정책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개발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 대륙붕의 석유시추 탐사를 승인하고 에너지

북아메리카

미국

그림 22. 북극권 8개 국가



그림 출처: 아시아경제

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등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The America First Energy Plan)'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환경 보호의 기조로 전환되어 북극지역에서의 화석연료 채굴 관련 정책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주요 강대국들이 북극 확보 전쟁에 뛰어들자,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북극권 조정관'을 '북극권 특사'로 격상하여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견제에 나섰다.

주요 강대국의 북극 패권 다툼

최근 들어 주요 강대국들은 북극지역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북극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의 경제적·군사적 야망은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3월 승인된 '러시아 연방 외교 정책' 문서에서는 북극에 대한 외교정책 방향을 별도로 언급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북극항로 개척과 러시아 북극 자유무역지대(Russia Arctic Free Trade Zone) 창설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북극에 대한 우위 선점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아메리카

미국

한편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 약 1,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칭하며 2030년까지 '극지대국(极地大国)'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북극해 인접국(Near Arctic State)으로서 중국 역시 북극 문제의 이해당사국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은 노르웨이의 스발바르와 아이슬란드에 두 곳의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해양생태학에서 대기물리학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일종의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함으로써 북극에서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최근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중국 해경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해상에서의 법 집행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하며 북극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동 견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양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공동기구 창설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북극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그림 23. 시진핑 국가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및 대통령 회담



그림 출처: 신화통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견제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2019년 미국 해안경비대와 국방부에서는 북극전략(United States Coast Guard Arctic Strategic Outlook, D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군사적 감시·통신

북아메리카

미국

능력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최근 러시아와 NATO 간의 군사적 경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NATO의 중심 국가로서 북극전략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북극권 동맹국들 간의 역할 확대와 상호간 방어의무를 강화해 나가야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북극 진출과 쇄빙선 확보

북극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쇄빙선의 확보가 우위 선점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극지역에서 쇄빙선은 다른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팀들과 함께 움직이는 연구기관 및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후변화 중심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북극지역에서의 주요 위협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북극지역에 취역 가능한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극지역에서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 해안경비대는 단 두 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다. 한 척은 이미 30년의 수명을 10년이나 초과하여 운항에 투입된 'Polar Star'호와 전기 화재 이후 최근 들어 수리된 'Healy'호가 전부이다. 반면 중국은 2척을 운항하면서 이외에도 활발하게 선박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유일한 핵 추진 쇄빙선 보유국으로서, 46척을 운항하고 있다. 미국의 쇄빙선 보유 및 운항 현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북극정책에서 쇄빙선 확보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실행에 있어 주요 결함으로 꼽힌다.

그림 24. 미국 해안경비대의 쇄빙선 'Polar Star'호



그림 출처: Military Times

북아메리카

미국

미국의 향후 북극정책 방향

이와 같이 그동안 미국의 북극항로 개발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데에는 미국은 북극 항로를 통하지 않더라도 수에즈 운하를 통해 연결되는 해상 무역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도로와 철도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 개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미국은 북극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극히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소 북극지역 개발에 소극적으로 나섰고 결국 세력은 점차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기우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극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크게 외교 및 안보 분야, 그리고 과학·연구 및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회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두 가지 정책필러를 기초로 북극에서의 입지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회는 새로운 '극지 안보 쇄빙선(Polar Security Cutters, PSC)' 건조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미국의 북극 안보 프로그램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해안경비대의 예산 확보를 통해 미국 최초의 핵 추진 쇄빙선의 설계 및 건조를 위해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 역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미 해군 및 NATO군과의 협력을 통해 북극지역 영향력 확대 및 이익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와 같이 향후 미국은 북극지역에서의 외교, 안보, 과학, 경제적 입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극 경쟁에서의 확실한 입지를 굳혀야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출처 : [1] CIMSEC, 2023년 4월 13일, "Why the US is losing the race for the Arctic and what to do about it" [2] MilitaryTimes, 2022년 1월 27일, "Securing the north: Expanding the United States' icebreaker fleet" [3] CSIS, 2023년 4월 18일, "Frozen Frontiers: China's Great Power Ambitions in the Polar Regions" [4] 中央政府门户网站, 2014년 11월 19일, "海洋局局长：从极地大国迈向极地强国" [5] 서현교, 2016년,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 고찰과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6] 아시아경제, 2022년 8월 29일, "미·중·러 북극 패권경쟁" [7] United States Coast Guard, 2019년 4월, "United States Coast Guard Arctic Strategic Outlook"

유럽
러시아

전문연구원 김 지 혜

러시아와 중국, 해상법 집행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 국경경비총국(FSB)과 중국 해경이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바렌츠해와 북극해에서의 해상법 집행 협력에 관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국은 MOU에 따라 테러, 무기 및 마약 밀수, 불법이주 대응, 해양 생물자원의 불법 어획 방지, 해상 구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체결식 이후에는 러시아가 이끈 Arctic Patrol 2023 해상안보 훈련에 중국이 옵서버로 초대되어 이를 참관했고, 이어서 무르만스크 주지사와 중국 외교관들이 만나 비즈니스 협력, 선박 건조,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그림 25. 러시아 FSB-중국 해경 MOU 체결식



그림 출처: Weibo

이번 MOU 체결 배경에 대해 FSB 국경수비대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극 7개 국가들과의 해양경비대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8개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와 북극경제이사회, 북극해양경비대포럼 등의 북극권 국가 간 주요 북극 협의체 의장직을 2년마다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2021년부터 이들 주요 협의체에서 러시아가 의장을 맡게 됐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유럽

러시아

러시아를 제외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 나머지 7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가 이끌고 있는 북극이사회 활동을 임시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극이사회 외 북극경제이사회, 북극해양경비대포럼 등 러시아가 의장을 맡고 있는 나머지 협의체에서도 북극권 국가 간 협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북극해양경비대포럼에서는 금년 중 오랫동안 준비한 Arctic Patrol 2023이라는 공동 다자해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나머지 7개 북극권 국가들이 불참하면서 FSB는 중국을 옵서버로 초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의 해상법 집행 협력 MOU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중국 해상경비대가 공동훈련에도 참가하는 게 MOU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26. 러시아 Arctic Patrol 2023의 일환으로 진행된 반테러 훈련을 참관하는 중국 해경 관계자



그림 출처: Murmanski Vestnik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국들로 대표되는 기존 국제체제에 대항하여 전략적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19년 6월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시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이후, 2022년 2월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의 관계를 “무제한의 우호(no-limits

유럽
러시아

friendship)"라고 선언한바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에 있어서 만큼은 중국이 너무 가까워 지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것으로 생각됐지만, 이번 양국간 MOU 체결은 러시아가 참여를 제한할 것으로 생각했던 북극의 분야에서 마저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셈법이 달라져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근북극권 국가"를 자칭하며 북극에 대한 야심을 보여왔지만, 그간 북극권에서의 존재감은 컨퍼런스 참여와 연구활동, 그리고 러시아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투자, 일부 북극항로 운항 정도에만 머물렀다. 해양경비대의 업무는 수산자원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접근권과 같이 주로 해상에서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로, 해양경비대 협력은 군사협력에 비해 덜 위협적이면서도 실제적 행동을 요구하여, 어업지도와 같은 해양경비대 업무에 중국의 참여는 안보적 요소가 있는 실용적인 협력이라는 큰 발전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7. 2023년 3월 21일 개최된 러시아-중국 정상회담



그림 출처: Shen Hong/Xinhua/Getty Images

출처 : [1] The Arctic, 2023년 4월 26일, "China and Russia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maritime law enforcement" [2] The Barents Observer, 2023년 4월 25일, "FSB signs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with China in Murmansk" [3] The Barents Observer, 2023년 4월 28일, "Russia's Coast Guard cooperation with China is a big step, Arctic security expert says"

태평양도서국

미국

전문연구원 민 영 훈

미국, 마이크로네시아와 오세아니아 해양안보작전(OSMI) 실시

미 해군과 미 해안경비대(USCG)는 3월 20일 오세아니아 해양안보작전(Oceania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OMSI) 일환으로 서태평양에서 불법(IUU)어업을 근절하고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는 지역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 순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이크로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IUU)어업을 근절하고 해양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 LCS 26, 헬리콥터 해상 타격대(HSM 49), USCG의 태평양 전술 법집행팀(Pacific Tactical Law Enforcement Team)이 함께 참여하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미 해군 리처드 스키넬(Richard Skinnell) 지휘관은 OMSI가 인도-태평양 해역 내에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협약의 내용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OMSI는 중서부 태평양해역에서 불법(IUU)어업을 근절하는 동시에 주변 태평양 도서국들의 어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들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28. 미 해군 연안전투함 LCS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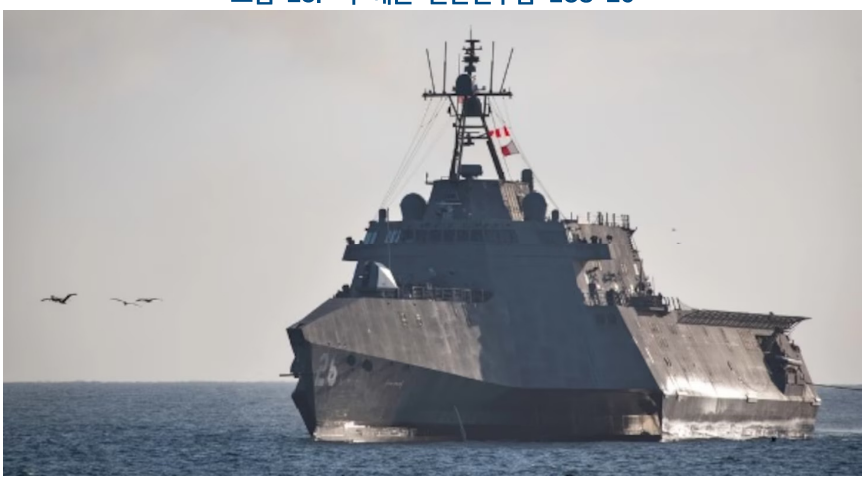


그림 출처: America's Navy

OMSI를 위해 마이크로네시아의 해양경찰 페리 테와스말(Perry Tewasmal) 또한 미 해군 연안전투함 LCS 26에 승선하였으며, 테와스말은 마이크로네

태평양도서국

미국

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자신의 전문지식을 USCG 법집행팀과 연안전투함 LCS 26 승조원에게 전달했다. 테와스말은 이러한 작전이 마이크로네시아 해역의 자국 어부들에게 자신들이 법규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테와스말의 미 해군 연안전투함 승선은 마이크로네시아 해역에서 미 해군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관할권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테와스말은 현지인으로서 마이크로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뿐만 아니라 미 해군자산과 USCG 전술 법집행팀이 자연스럽게 운용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 또한 감당한다. USCG의 제리드 미할치크(Jared Mihalcik)는 테와스말이 자국 수역에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 해군은 교통수단을 USCG는 여분의 자원과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 밝히면서, OMSI 기간 동안 미국은 현지의 권한 있는 법집행관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목표한 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강조하였다.

OMSI는 미 국방부의 프로그램으로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와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를 개선하기 위해, 해군 함정을 이용하여 해안경비대의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합동 및 연합작전을 통해 동맹국, 협력국, 우방국과의 안보공약을 실천한다. 특히, 제프 브라이언트(Jeff Bryant) USCG 집행국장은 마이크로네시아를 포함한 오세아니아 해역의 태평양도서국들과 OMSI를 통해 협력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블루 태평양(Blue Pacific)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마이크로네시아의 해양주권을 보존하고 해양거버넌스를 유지하는데 함께 헌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강조하였다.

OMSI는 USCG의 태평양 전술 법집행팀의 법집행분대가 미 해군의 최신예 함정인 연안전투함 LCS 26에 승선하여, WCPFC협약을 집행하고 중서태평양해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억제한다. 특히, 미 해군 연안전투함 LCS 26은 민첩한 기동 능력, 유인 및 무인항공기 탑재, 대형 비행 갑판 및 지상전 임무를 위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다목적 작전에 투입되기에 적정하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 3함대는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력하여, 항해의 자유, 법치주의, 역내 안보를 지원한다.

출처 : [1] America's Navy, 2023년 3월 24일, Navy, Coast Guard Begin Oceania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Patrol [2] America's Navy, 2023년 4월 7일, Oceania Maritime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US Navy, US Coast Guard, Ship Rider Patrol Micronesian Waters.

3개월 내 행사계획

제2차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

5월 29일(금) ~ 6월 2일/ 프랑스 파리

- **주최** 유엔 환경계획
- **주요 내용**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

국제해양법학회 춘계 학술행사

6월 2일(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최** 국제해양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6월 16일(금) / 서울 더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

-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 **주요 내용** 제1부.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제2부.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70주년 기념학술행사
  제3부.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70주년 대토론회
  제4부.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만찬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

6월 12일(월) ~ 16(금) / 미국 뉴욕 유엔본부

- **주최** 유엔
- **주요 내용** 매년 개최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간 회의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제2차 당사국총회

6월 12일(월) ~ 14일(수)/ 대한민국 인천

- **주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당사국
- **주요 내용**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해 공해지역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이 체결한 협정